

● **국립대 법인화 안 하면 불이익**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가 특수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혜택 등의 보장을 받지만,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새로 도입되는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은 관련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

7월 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는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학교운영이 어려운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을 일부 환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의 경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대학에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지속 부여 등 교직원들의 신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신,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립대가 특수법인화되면 다양한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발전의 핵심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점진적으로 재정이나 교수 정원,

예산 배정 등의 지원을 줄여나가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생 수 격감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이 스스로 법인을 해산할 때는 잔여 재산 일부를 환원해줘 사학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재산 환원 수위에 대해 교육부는 출연 당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과 출연 당시 재산에 물가나 지가 상승률 등을 더해 돌려주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교직원 명퇴금과 학생 등록금 등을 공제한 후 환원해 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경제 단체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을 유도하고,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관련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없애지 않고,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 경영대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MBA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며 “어떤 비율과 기준으로 학부와 전문대학원을 허용할지 경영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설립요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학원 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2+4’ 형식의 의학전문대학원은 10% 이내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로스쿨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전국 단위 산학연계를 위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커넥트 코리아 사업단’을 15개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9월부터 대학 신설 요건 강화**

9월부터 대학 신설 시 최소 규모 학생정원은 1천 명, 수익용 기본재산은 1백억 원으로 설립요건이 강화되었다.

또 사학법인이 동일법인, 동일 권역의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30일 영세사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대학 신설 시 설립자의 욕망의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지표와 함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립자의 욕망의지와 교육과정, 학교 운영 능력을

인터뷰 등을 통해 심사하고,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현행 대학은 4백 명에서 1천 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백 명에서 2백 명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대학은 1백억 원, 전문대학은 70억 원, 대학원대학은 40억 원으로 신설했으며, 1개 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설치 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부실대학을 양산한 측면이 있는 데다 대학설립 이후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는 영세 법인의 추가 대학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권역, 동일법인 내의 산업대와 전문대학이 통·폐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즉,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기존에는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정량적 지표 위주로 대학설립을 심사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부실대학 양산을 막고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 교가 늘었는데, 이중 21개는 각종 학교나 전문대학 등이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 대학이 신설됐다.

### ● 신진교수 665명에 연구비 108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7일 올해 신진교수 연구지원 사업 심사 결과 665과제에 모두 10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초 임용된 지 5년 이내의 국내 대학 신진교수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1,879개 과제가 접수되어 3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 과제는 분야별로 인문사회 221개, 이공학 273개, 의약학 112개 등으로 연구비는 인문사회가 29억 원, 자연과학은 7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구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선정과제 목록과 심사의견, 과제별 지원 연구비 등은 선정작업을 진행한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교육부 규제가 대학 경쟁력 저해 주범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정부가 대학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7월 7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의 자율성에 간섭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립대학을 인정한 것은 대학에 대한 자율성이 전제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강력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주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내에서의 생존보다 해외 교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러나 이 같은 자율성에는 반드시 ‘투명한 회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0여 명의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그는 “지나친 규제에 대학의 역량

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내용성과 건실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기획처장은 “수도권 특성화사업이나 누리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없다”며 “이러한 대학들은 지원도 없고, 교육부의 압박만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경만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평가처장은 “교육부의 역할은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대학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학의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시장개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황우여 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해외학생의 유치노력 강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GDP 1만 불 시절의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0만 명의 학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를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교육부, 전남대·영남대·강원대 e-러닝 지원센터 선정

전남대와 영남대, 강원대가 올해 대학 e-러닝 지원센터로 선정해 19억6천3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4일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3개 권역에서 대학 e-러닝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한 결과 15개 주관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07년까지 총 1백16억 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권역별로 1개 대학씩을 지원센터로 지정, 지역 내 콘텐츠 공동개발과 학점교류 확대 등을 전파할 방침으로, 센터에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교수학습지원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전남대는 권역 내 37개 대학 등 88개 기관과 함께 문화산업 e-러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30억 원을 별도 투자할 예정이다.

영남대는 35개 대학 등 58개 기관과 산·학·연 e-러닝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강원대는 18개 대학 등 19개 기관이 군·학 e-러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3년에는 제주대(제주권)를, 지난해는 경상대(경남권)를 각각 센터로 선정한 바 있다.

### ● 교육부, ‘커넥트 코리아’ 사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사업화의 전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과 재원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업은 내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지역거점별로 15개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1백 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학·기업·중앙 정부 등 관련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7월 20일에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과 토론 등을 통해 커넥트 코리아, 전문대학원 육성방안 등 각종 대학 지원책을 소개했다.

### ● 국교련,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반발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7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 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국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였다.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 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3천 9백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과 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어입학제를 금지한 3분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23개 국·공립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탈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을 침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 ● 교육부, 논술교육 강화방안 착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부터 초·중·고교별로 정규교과 시간에 논술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7월 21일 밝혔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주요 대학이 수험생의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논술지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경우 종합적 사고력 등의 기초를 길러주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학교 도서관과 학급 도서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토론수업 등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교에서는 교과별로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각 교과에서 체득한 지식을 통합교과형으로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심화선택 교과인 ‘독서’ 및 ‘작문’ 시간을 활용해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용 ‘논술·면접 지도 자료’ 4종을 개발 중이며 논술지도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되 교육청이 요청하면 교육부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 ● 11개 대학서 AP제도 시범운영

서울대, 고려대, KASIT, 부산대, 전남대 등 11개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수나 교사들로부터 대학 전공기초과목을 미리 배울 수 있는 '대학과목선 이수제(AP)'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5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대학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AP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충남대, 강원대, 연세대(원주), 강릉대, 충북대, 제주대 등 11개 대학에서 대학 1, 2학년의 전공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제2외국어 등 10개 과목이 시범 개설되었다.

과목별로 45시간을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점수(A~F)가 부여되고, 공동이수증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특기사항에 이수 결과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AP제도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대학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고교생은 각 교육청에서 과학고, 외국어고는 희망자를, 일반계고는 상위 3~5%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거쳐 참여 모집한 결과 총 7백 60여 명의 학생이 선정됐다.

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가 맡게 되나,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교사가 협력해 지도하기도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P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교생의 대학입학 전 과목이수의 학점화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AP과정 이수결과를 대학입시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 ● 과기부, 대학 연구비 관리 강화

과학기술부는 최근 잇단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연구비 유용 근절방안으로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는 산·학·연의 연구기관의 내부 연구비 통제 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집행 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인증을 통해 일정기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올 하반기 산·학·연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여 개를 선정, 시범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연구기관에 정부인증을 부여하고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학생 인건비 풀링제는 최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마련됐다.

대학본부가 학생 인건비를 연구실 단위에서 '풀'로 모아 연구실별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실제 참여율을 결정해 대학본부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되, 대학본부 책임하에 인건비 지급을 검중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하반기 인건비 풀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진시안을 마련, 연말께 관련 법령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 ● 교수가 논술 사교육 참여 땀 의법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 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7월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외국 의대 졸업자 국내 면허 취득 시 예비시험 실시**

8월 9일부터 외국의 의대, 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의료 면허를 얻고자 할 경우 국가시험의 전 단계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첫 시험 시행 계획을 지난 8월 2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의료 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치과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가 국내 대학 졸업자의 30%를 넘어서는 등 의료 인력 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예비시험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의학적 기초 지식과 한국어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예비시험에는 의사 40여 명, 치과 의사 2백여 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외국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이나 파라과

이 등 우리나라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곳에서 수학한 사람들”이라며 “예비 시험이 외국의 의대, 치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유학을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실험실, 전문대 등에 1천 2백 50억 원 지원**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대학원 실험실 52곳과 산학협력 전문대학·기능대학 30곳 등에 3~5년간 모두 1천2백5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8월 3일 대학원 실험실과 산학협력 및 성장동력 전문대·기능대 등을 지원하는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우수 연구소를 지원하는 ‘최우수 실험실’ 사업에는 1백 51개 실험실 가운데 52곳이 선정돼 3년간 1백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실험실당 연간 1억 원 내외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10대 성장동력 분야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을 대상으로 3~4년간 연간 8~10억

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는 전문대학 22곳과 기능대 8곳이 각각 뽑혔다.

4년간 3백20억 원이 투입되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에는 인덕대학, 두원공과대학, 한림성심대학, 주성대학, 대덕대학, 군장대학, 남도대학, 영진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 남해전문대학 등 10곳이 선정됐다.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에는 동아방송대학, 인천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성남기능대학, 광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 인화공업전문대학, 오산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구미1대학, 서울정수기능대학, 청주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신흥대학, 장안대학, 경북전문대학, 안산1대학, 제주한라대학, 서울보건대학 등 20곳이 3년간 6백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하갑재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2008년까지 3만여 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학협력확산사업은 지난해 교육부와 산자부가 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올해 노동부가 새로 참여하면서 지원대상이 대학원, 전문대학, 실업고 등으로 확

대했다.

### ● '방만 운영' 누리사업 논란 확산

참여정부의 간판 지방대 육성사업인 '누리(NURI)사업'의 1차 연도 평가 결과 사업단 7곳이 퇴출되고, 61곳의 지원금이 삭감되자 사업단 선정방법과 지원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1백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연간 사업비 72억 원이 중단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61곳의 지원금 1백73억 원이 깎이는 등 지난해 지원금 2천2백억 원 중 13%인 2백86억 원이 지원 중단 또는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연수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과다 사용하거나 취업률 등의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국고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나눠먹기식 예산 낭비'라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8월 17일 "지난해 8월 현장실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67개 사업단 중 26개가 올해 또 경고를 받았다"며 "같은 문제점이 수십 개 대학에서 반복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으며 누리사업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대학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에는 경고를 면제해주거나 가점을 준 것과 관련, "통·폐합이 진행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백억 원 가운데 통·폐합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차의적 관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지난 8월 16일 "누리사업 선정 과정이나 관리 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지방대가 전략을 세워 목돈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가 없고 재정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평가에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서는 군살빼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약학대 6년제로 전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이 '2+4체제'의 6년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09·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약대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대학 신입생들은 약대 이외의 다른 학부나 학과에 입학해 2년 이상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 4년간 전공 및 실무교육을 배워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약학과는 현재와 같이 4년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9일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을 확보하고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수업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약학 전공 신입생들은 다른 학부나 학과에 입학해 기초·교양교육을 배운 후 PCAT(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과 대학별 선수과목, 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 각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신입생들이 실제 약학대학에 진입하는 시점은 2011학년도로,

6년제 전환 후 첫 졸업생은 2014학년도에 배출된다. 각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은 대학 자율로 정해지는데, 교육부는 약학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 2007년 12월께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새로운 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비와 PCAT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약대 학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대 학제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전문대, 방송통신대, 산업대를 포함해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면 누구나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 없이 각 대학의 4년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약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PCAT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결과의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각 대학은 선수과목, 대학 2년 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 지원자격을 마

련해 예고하게 된다.

PCAT는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약학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시험은 각 대학별로 출제·관리하거나 약대 간 연합에 의해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하다.

약대 학제 연장이 이공계 기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중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2005학년도 기준으로 약대 입학정원은 이공계의 0.98% 수준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 입학정원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1천2백3명을 선발하고 있다.

● **정부-재계, 산학협력 통한 고급인력 양성 강화**

정부와 재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산학협력을 강화, 고급인력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월 25일 서울 세종클럽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여개 주요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담당 임원이 참석한 '기술임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매년 3천억 원씩 지원할 예정인 제2단계 BK21 사업과 관련,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력 양성사업단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기술임원협의회측과 공동 실무팀을 구성,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했다.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비중이 낮고, 선진국에 비해 기업이 대학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이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10.1%인데 반해 미국은 16.8%, 독일은 17.1%에 달했다.

또한 1999년부터 7년간 시행된 1단계 BK21 사업이 대학의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뤘지만, 산학협력의 성과는 미흡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정부는 2단계 BK21 사업 기획과정에서 산학협력 부문을 적극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외에도 자원, 철강, 첨단신소재 분야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이공계 전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에 우수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기업수요에 보다 적합한 대학의 연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전국의 기업체 부설 연구소는 1만1천94개에 달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비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4조5천97억 원에 달해 우리나라 총 연구비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 ● 교육부, 인문사회 연구비 630억 원 지원

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1백86개 과제에 3백90억 원, 계속지원 1백개 과제에 2백40억 원 등 모두 6백 3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8월 25일 고문서·고서수집, 역사·민속지리, 역사·문화지도 편찬 등 토대연구 분야 51개 과제와 인문학, 사회과학, 지역연구, 문화연구 등 심화연구 분야 1백35개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총 6백46개 신청과제 중 이번

에 선정된 과제는 10억 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형 과제 2건, 3억 원 이내가 지원되는 중형 과제 43건, 1억5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소형 과제 1백41건 등이다. 연구비는 최장 3년간 지원된다.

대형 과제의 경우, 서울대학교 김중수 교수팀의 '규장각 소장 중요 자료 역주'와 성균관대학교 임경석 교수팀의 '동아시아 근대 언론매체사전 편찬 및 디지털사전 DB 구축이 선제공대 각각 6억6천만 원과 6억1천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 과제와 심사의견, 지원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의 '통합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02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으로, 기초학문 연구력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학술연구 조성사업의 정규사업으로 편입됐다.

### ● 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 배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6일 오는 2008년 개교 예정인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총리와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구본희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볼 때 로스쿨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방대학이 로스쿨 배정과 예산 지

원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로 책정한 9억 원의 예산을 전국 대학에 균형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립대 교원 성과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을 40억 원 증액키로 했으며, 국립대 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 놓여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도우미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